
칠레 혹은 미래의 현기증

카롤리나 토아¹⁾

정치학자

원제와 출처: Carolina Tohá, "Chile o el vértigo del futuro",
Nueva Sociedad, No. 286, marzo-abril de 2020, pp. 78-92.

핵심어: 민주주의, 불평등, 신자유주의 선거, 시위, 칠레

우리의 위기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만의 위기일까? 칠레에서 벌어진 논쟁들을 보면 전적으로 칠레만의 위기인 것처럼 여겨진다.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고 관련 논쟁들이 벌어지지만, 모든 가설이 다음과 같이 지역적 상황만을 거론한다. 첫째, 칠레가 되돌리지 못한 불평등. 둘째, 경제전망의 악화. 셋째, 정치권과 사회 사이의 심연. 이 세 가지 상황은 너무나 자명하다. 하나하나가 불안과 불편함을 능히 초래할 강력한 요소이다. 그리고 불안과 불편함의 조합은 위기를

1) 정치인이기도 하다. 하원의원(2002~2009) 및 미첼 바첼레트 1기 정부 공보부(Ministerio Secretaría General) 장관(2009), 산티아고 시장(2012~2016)을 역임했다(역주).

초래할 완벽한 카테일이다. 하지만... 이런 위기까지 초래할 정도인가? 이토록 폭발적이고 결정적이고 급진적인 위기를?

칠레 위기는 다수의 지역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위기를 추동하는 깊은 물결은 훨씬 더 큰 폭풍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발전 시스템이 야기한 불만과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내어놓아야 하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다양한 징후로 동일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칠레인의 불편함에는 신자유주의 개념들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 점만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부가적인 요인들이 더 있다. 전통적인 정당들의 쇠락을 비롯한 정치적·사회적 대표성의 위기, 기후 변화와 이에 따른 엄청난 딜레마, SNS를 통한 논쟁의 양극화, 기술 변화가 격발한 노동의 미래, 이주 물결과 이에 따른 두려움, 전통적인 사회 정체성의 해체와 이에 따른 문화적 파편화,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해 세계 상당 지역에 드리운 비관적인 장기 경제전망 등이다. 오늘날 세계를 옥죄는 요인들은 너무도 심층적이고 다양해서, 신자유주의 모델의 위기가 아니라 일종의 시대적 전환, 현재 우리가 위치한 폭풍우의 중심부에서 그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이행일지도 모른다.

칠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양상은 지역적 맥락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형적인 전지구적 과정과 결부된 칠레의 정치적 역정의 역사가 긴 것도 사실이다. 전지구적 과정이 위기에 빠진 칠레 정치를 끝장내든 해결책을 주든 이상할 것 없을 정도이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 칠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연구를 하면 두 가지 분석 양상이 대두될 것이다. 하나는 사회의 심층적인 역동성을 주목할 것이다. 이 역동성은 사회질서의 합법성을 대단히 취약하게 만들었다. 또한 제도적 방법으로 그 질서를 바꿀 가능성에 대한 너무나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했다. 그리하여 상당수 국민은 변화의 가능성을 열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걸 듯한 태세로 임했다. 또

다른 분석 방식은 위기관리 미숙, 불편함을 급격히 고조시킨 잘못된 초기 대응, 이를 바로잡으려다 저지른 혼란 등 현 지도부가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리라는 느낌을 야기한 상황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 경우 '지도부'는 일차적으로는 정부, 특히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을 가리킨다. 그러나 해결책 도출 역할을 하지 못한 야권과 기타 기관들도 가리키고 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칠레가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은 신비한 것이어서, 이 치열한 몇 주 동안 우왕좌왕하던 정치 지도층은 향후 파장도 가늠하지 못한 채 출구를 만들어냈다. 1980년 헌법에 가장 목을 매던 우파가 이를 포기할 용의가 생겼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리를 안정시키고 장악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중도좌파는 1980년 헌법의 개헌이 민중의 승리로 인식될 것이고, 그러면 칠레 국민은 적어도 잠시나마 자신들이 국면을 주도하는 것을 다시 지지하리라고 생각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규칙 정립과 새로운 리더십 경쟁이 동시에 펼쳐질 중기적 여정이 시작되었다. 특정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 결과는 누가 책임자인가에 달려 있다. 사회적 폭발을 해결할 책임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호이해 방식, 향후 2, 3년간 더듬더듬 구축될 그 무엇인가를 차츰 차츰 도출해 나갈 수 있는 책임자 말이다. 여기서 '책임자'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한 사상과 정치적 행동 방식도 가리킨다.

불평등, 경제, 정치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위기에 자양분을 제공한 요소는 다수이다. 칠레의 불평등이 가장 명백한 원인이다. 하지만 불평등에도 여러 차원의 불평등이 있고, 모든 불평등이 다 같은 비중을 지닌 것은 아니다. 지니계수상의 불평등은 주요

불평등이 아니다. 그 지표에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 추세였다. 지니계수 지표에서 칠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오랜 세월 최하위권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중위권이다. 유엔개발계획이 수행한 연구²⁾를 비롯한 여러 연구가 칠레 사회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불평등은 소득 격차가 아니라 이로 인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람들은 주머니 크기가 사회에서 받는 대접의 차이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더 분노한다. 다른 시각들은 경제적 차이가 보건이나 교육 같은 기본적 사회권 행사에 끼치는 영향을 주목한다. 이 두 분야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가 추진한 '개혁'의 유산이 가시적으로 남아 있는 영역이다. 칠레의 보건·교육·연금 시스템은 지극히 시장 친화적이어서 납입 능력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나고, 이 세 분야에서 고수의 기업들이 생겨났다. 비록 일부 도가 지나친 요소 혹은 배타적인 요소를 중화시키는 중요한 개혁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본질은 변함없고 이를 실질적으로 문제 삼는 여건이 형성된 적도 결코 없었다.

경제전망의 후퇴 역시 근본적인 요인이다. 민주화 이후 칠레는 세계화의 팽창 국면에서의 경제개방이 야기한 기회, 이에 뒤이어 칠레를 비롯해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수혜를 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덕분에 혜택을 누렸다. 이 두 물결이 종식되자, 남은 것은 평범한 성장세의 경제였다. 반면 소비 성향은 지난 30년 동안 관성적으로 증대 추세였는데, 문제는 채무가 가계를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와 사회의 결별, 아니 제도와 사회의 결별은 이미 오랜 기간 진행되었다. 1990년대 말 투표 기권자 증가로 시작되어 지지 정당에 대한 충성도 감소로 이어지더니, 이윽고 불신이 증대했다. 결정타는 잇단 부패 및 권력 남용 스캔들이었다. 이는 기업, 정치, 교회, 축구계, 경찰, 군 등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가리

2) PNUD: *Desiguales. Orígenes, cambios y desafíos de la brecha social en Chile*, PNUD/Uqbar Editores, Santiago de Chile, 2017.

지 않고 실질적으로 권력이 있는 모든 곳에서 발생했다. 모든 영역에서 권위가 파산한 꼴이다.

이런 문제들은 칠레에게 골치 아픈 일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칠레의 문제만은 아니다. 칠레의 불평등은 역내 평균치보다 더 심하지 않고, 경제가 더 활력을 잃은 것도 아니고, 부패지수가 더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제일 대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불편함을 크게 느끼는 나라가 칠레이다. 이 지경에 이른 이유가 결코 문제가 더 심각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특히 결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칠레에서 벌어진 일은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문제 제기나 경제 전략의 고갈이라기보다 정치 붕괴라는 측면이 더 크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바이다. 위기의 결과, 신자유주의적 유산에서 탈피하고 발전모델을 재구성하기 위한 창문이 열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절을 야기하고 사람들의 인내심을 다하게 한 것은 이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정치 과정의 실종에서 비롯된 절망이다.

정치, 정치, 정치

많은 사람이 칠레 위기에서 신자유주의 모델의 종식을 보았다. 칠레는 오랫동안 신자유주의 이념의 메카로 여겨졌다. 신자유주의 모델은 군부 독재 시기에 칠레의 사회경제적 모델이 되었고, 1980년 헌법에 족쇄가 마련되고 그 후 다른 정치 세력들이 이를 풀지 못하면서 수십 년 동안 유지되었다.

흔히 말하는 칠레 모델, 많은 사람이 신자유주의 모델의 정수로 보는 이 모델은 사실 그러한 정의 이상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칠레 모델에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내재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다른 곳에서 드문 사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곳에서 국제공통어로 자리

잡았다. 다만 칠레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뿐이다. 신자유주의는 칠레에서 오랫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신자유주의 이념의 기본 관념들이 적어도 2008년의 경제위기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토를 획득하지 않았다면, 또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이념을 성공리에 대체할 대안적 시각이 부상했다면 말이다.

결국 칠레를 상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사상의 고갈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현재의 전 세계 모든 사회에 다른 사상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체 사상이 있었다면, 칠레 위기는 사뭇 다른 경로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사상의 결핍이 우리를 사회적 폭발로 이끌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렉시트, 니콜라스 마두로, 혹은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좌절 등으로 우리를 치닫게 할 수도 있다. 사회질서를 비판하는 것과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칠레 시스템에 동의하지 못하는 폭넓은 정치·사회 세력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새로운 대안을 도출할 순간까지만 그럴 뿐이다. 그 순간이 오면 여론 분산, 상호 비방, 합의 불발에 대한 변명이 지배하게 된다. 칠레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이념의 힘, 그리고 이에 대한 환멸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현상은 순전히 칠레적인 것만도 아니고 전적으로 피노체트파의 집요한 유산이라고 치부할 일도 아니다. 진보진영의 대안 부재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칠레 모델이 순수한 신자유주의 모델이라는 정의에 위배되는 또 다른 요소는 칠레가 그 이념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며 추진해 온 일련의 변화이다. 어찌되었든 최근 30년 세월에서 24년을 중도좌파 정부들이 신자유주의와 상당히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칠레를 통치했다. 그 스토리는 수평성, 권리, 평등, 차별 반대, 포용의 문법을 구축하였고, 칠레 사회를 그 방향으로 밀고 가면서 길을 가로막

는 장애물들과 싸워나갔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이끈 바로 그 정치 지도층이 그만 제거해야 할 장애물편에 남아버렸다.

칠레에는 용인하기 힘든 여러 가지 불평등이 잔존해 있다. 하지만 칠레는 기존의 보수주의를 뿌리친 사회, 제반 권리에 대한 의식을 갖추게 된 사회, 법 앞의 평등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회이다. 그 어떤 변화도 저절로 얻은 것이 없고, 일각의 주장처럼 경제발전에 따라 자동적으로 얻은 것도 아니다. 그 개념들이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또 공공정책, 제도, 사회적 정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수많은 정치 투쟁을 한 결과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 칠레는 자신의 약속, 자신의 것으로 삼은 이미지(상당 부분 진보진영의 정치 스토리에 의해 설정된 이미지지만,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유지된 이미지이기도 하다)와 점점 더 괴리를 보이기 시작했다. 칠레의 약속은 결코 순전히 신자유주의적 제안이 아니었다. 신자유주의적 요소도 있었지만, 다른 요소들과 뒤섞인 독특한 혼종의 약속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유산이 아니라 바로 그 혼종의 약속이 칠레 모델인 것이다.

칠레가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했을 때, 그저 거시경제 지표, 성장, 수출만 거론한 것이 아니다. 빈곤 축소, 고등교육, 교육편차 해소, 삶의 희망, 더 많은 자유, 여성의 발전, 검열 종식, 이혼 합법화,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인정, 차별 반대 노력, 투명성 고취, 보장된 권리들의 실현,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신자유주의적 토대들이 존재하고 유지되었지만, 이들과는 다른 일련의 요소와 조합시켰다. 칠레의 약속은 평등한 성장이었고, 점진적인 수혜를 골자로 하는 공익적 정치의 약속이었다.

문제는 그 길이 벽에 부딪혀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혼 및 모든 형태의 낙태를 가로막은 보수주의를 패퇴시킨 그 전진 이력이 왜 복지 모델을 바꾸는 데는 무능했을까?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공적 시스템을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인이 의심하던 세금 포탈 메커니즘은 분쇄하지 못했을까? 권위주

의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1980년 헌법을 60차례 이상 원포인트 개정했으면 서도 통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작동하는 과반수 의결을 가로막는 여러 종류의 압도적 다수 정족수 체제를 들어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GDP에서 보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 배로 증가했건만 어째서 부자와 건강 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이중적 보건 시스템을 끝장내지 못했을까? 칠레를 착취해 온 것은 현 제도의 틀에서는 출구 없는 논의들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 창출에 무능한 정치 시스템이었다. 우파는 현 시스템 덕분에 누리는 이점들을 너무 오래 누렸다. 아마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중도파와 좌파도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호소한 적이 없다. 심지어 핵심 문제로 전면에 내세운 적도 없다. 만일 그리했다면, 사회운동의 분노의 숨결을 지금 목덜미에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칠레 모델과 함께 신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이에 맞서 싸우는 진보정치도 추락하고 있다. 칠레의 사회적 폭발이라는 희한한 실험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 국면은 바로 칠레 모델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드릴 수 없는 것을 건드리고 있고, 논의의 일들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정치가 풀지 못한 매듭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쟁들이 정치에서 출구를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아직껏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두 가지 매듭이 분명히 드러났다.

첫 번째 매듭은 과반수 의결에 반(反)하는 1980년 헌법이다. 하원의원 선거에 적용되어 대표성을 침해하는 칠레식 명부제, 헌법재판소, 압도적 정족수가 그런 요소들이다. 앞의 두 가지를 개혁하려는 정치적 에너지는 늘 존재했고, 그 결과

칠레식 명부제는 이미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실 핵심 문제는 세 번째이다. 칠레 시스템에는 특정 정족수가 충족되어야만(절대 과반에서부터 7분의 4, 5분의 3, 3분의 2 등 다양하다) 개혁 가능한 사안들이 준비하다. 견고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 칠레만큼 다채로운 특정 정족수 조항이 존재하는 사례는 없다. 칠레에서 그러한 정족수들은 상당수 우파 인사들의 동의 없이는 거의 도달 불가능하다. 보건이나 복지 같은 분야에서 변화를 지지하는 이들이 오랫동안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관철하는 일은 정치권의 전반적인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 많은 제약 때문에 철저히 실용적인 합의만이 진전을 일궈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면 하나를 얻으려고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렇게 하는 일이 결코 잘못이 아니었고, 기존 제도를 존중하는 것 역시 잘못이 아니었다. 오류는 그 제약의 게임에서 얻은 산물을 합의로 치부했다는 점이다. ‘합의 정치’라는 표현이 주도되었고, 이것이 최고의 민주적 성취로 포장되었다. 사실은 다수 결을 가로막는 헌법적 장애물들을 비켜 가기 위한 전략이었을 뿐인데도 말이다. 보수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주장들을 저지하고자 보험용으로 자신들이 도입한 그 장애물들에 용기백배했다. 그리하여 국가의 핵심 사안들에 대한 상이한 입장들이 다수를 다투는 민주주의 게임이 중요성을 상실하자, 시민들로서는 결코 그 속을 들여다보기 힘든 복잡하기 짝이 없는 협상 정치가 지배했다.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이들은 탁 트인 운동장, 협상 결과에 불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운동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급진화된 제안, 실현 불가능한 제안들을 위한 터전을 얻었다.

진보 정부들은 민주적 결정을 제약하는 그 족쇄들로부터의 출구 전략이 없었다. 많은 파벌이 중국에는 그 제약 구도에 편안함을 느꼈고 변화의 에너지가 약해졌다. 그토록 오랜 세월 권력을 잡고 있었으니 놀랄 일도 아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나머지 우리, 그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이다. 입장 차가 표출될 때마다 연정 내에는 긴장이 감돌고, 내부 통합과 안정이 위협받았다. 그러한 두려움들을 불식시킬 충분한 힘이나 결단은 결코 없었다. 각 파벌은 연정 내부에서 대안적 길을 제안하며 경쟁할 정치적 기치를 올리지 않았다. 점점 분파적으로 행동했고, 각각의 지도부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고, 많은 경우 국민의 불만과 좌절을 교묘히 이용하여 권력의 갑옷을 두텁게 했을 뿐이다. 압도적 정족수의 덮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에 치명적이다. '시민의 선거-요구-평가-선거'라는 민주주의 회로가 작동을 멈추었고, 이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과 투표 행위는 점점 더 무의미해졌다.

두 번째 매듭은 정치 영역이 지난 30년 동안의 심층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로 출현한 사회와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래전부터 지배 시스템의 일부 특징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칠레인들은 시장(市場)의 보건의,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지쳐 있다.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않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때 국민을 저버리고 잇속만 챙기기 때문이다. 우파가 내놓는 해결책은 아예 언급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좌파의 제안이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있다.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을 연대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집단적 혜택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공적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별도 교육비 부과를 제한하려고 했을 때, 미첼 바첼레트 정부는 우파의 저항에만 직면한 것이 아니다. 중도파와 중산층 상당 부문도 바첼레트의 개혁 의제에 등을 돌리고 주요 비판자로 돌변했다. 현재 진행 중인 복지 관련 논쟁을 보면, 가입자의 다수는 자신의 납입금을 공동 재분배 계좌로 돌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개인 계좌에 그대로 두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 몇 달 동안 거리로 뛰쳐나간 칠레 사회는 좌파적 요구를 하지만 좌파가 내건 해결책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요구가 많고 부당한 처우를 배격하

는 사회이지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재분배 시스템에 넘기는 일은 극렬하게 반대하는 개인주의적 사회이기도 한 것이다. 시장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지만 열광적인 소비주의 사회이고,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지만 이를 개인의 특권으로 여기지 모든 시민이 공유할 시스템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진보정치는 해결책의 제안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해결책을 실현할 방식도 논해야 한다. 좌파가 내거는 사회적 요구는 오늘의 빵을 내일의 굶주림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모두가 필요할 때 지원을 받고 모두가 타인의 부양에 기여하는 사회, 자기 것만 요구하지 않고 공동의 것에도 기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대 방식을 분명히 제안해야 이를 피할 수 있다. 칠레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의식구조, 문화, 가치, 우선순위 등을 해독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시민의 불편함을 해석하는 담론들도 신기루일 뿐이다. 현재의 칠레를 위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적 스토리의 구축은 미완의 과제, 탐색되지 않은 과제이다.

그 결과 어떤 이들은 칠레의 사회운동이 최초의 반신자유주의 봉기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신자유주의 자체의 최고 표현일 뿐이라고 믿고 있다. 어쩌면 중국에는 두 가지 다일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칠레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 난망이라는 점이다. 칠레 시스템의 신자유주의적 측면들만 도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주의가 그 흠결을 비판하는 방식 역시 도전받고 있기 때문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진보진영 내부와 사회운동의 일부 주요 부문이 합의를 본 현실적인 대안조차 감히 주장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칠레의 위기는 상당 부분 비신자유주의 진영의 파편화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이 진영 내부에는 오랜 세월 통치가 가능했을 정도의 상호 이해는 존재했지만, 피노체트에게 물려받은 제도를 대체할 공통의 도식 도출에는 실패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 장의 제목은 알레한드로 삼브라의 책 제목이다. 그는 이 책에서 삶이 우리를 믿기지 않는 장소로 데려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원래 정체성을 문제 삼은 일을 겪은 후에 유년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 다루고 있다.³⁾ 칠레는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집은 우리가 존엄성을 요구하며 버리고 떠난 바로 그 건물이어서는 안 된다. 집은 다르되 같은 가정, 불의와 불평등을 확실히 뒤엎을 행보를 위한 충분히 야심적인 변화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 가정이 여기까지 오는 여정에서 칠레인의 정체성을 구축한 빛과 그림자, 합의와 분류들도 안고 가기를 바란다.

칠레가 겪고 있는 위기는 ‘사회적 폭발’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기에 뺏조각을 뿌리는 폭발과는 거리가 멀다. 그 위기는 마치 러시아 인형, 즉 마트로 시카처럼 불만을 하나씩 꺼내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항의하는 소요로 시작되었고, 곧이어 ‘전진을 위한 존엄성’(dignidad por delante)이라는 구호와 함께 모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수위가 격상되었다. 소요가 일상이 되어 진부해지기 시작했을 때, 페미니즘 의제가 폭발했다. 이 의제는 이미 예전부터 제기된 것이었는데, 이제 여성들이 이를 통해 정치 논쟁을 다른 운동장으로 몰아갔다. 이 새로운 운동장에서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어느 때보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제들이 교실, 사무실, 식후 대화, 침대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1월은 학생들 차례였다. 학생운동 지도부조차 움직이지 않을 방향 중에 중등교육 과정 학생들이 대입 학력고사를 저지했고⁴⁾, 그 때문에 입시를 두 차례 더 치르게 되었고, 최

3) A. Zambra: *Formas de volver a casa*, Anagrama, Barcelona, 2011.

종적으로 역사 과목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2020년 칠레 대학 입학자들은 역사 성적은 반영되지 않고 선발될 것이다. 이렇게 2월이 왔다. 보통 모두가 '죽고', 멜론의 당도(糖度) 소식, 새로운 선댄 후유증 측정 개선 방식 이야기나 뉴스거리가 되는 달이다. 그러나 2020년에는 시위 뉴스가 계속 이어졌다. 이번에는 축구 팬클럽 차례였다. 사태는 악화되고, 대립 당사자들은 서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테러 이론들이 기상천외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칠레 사회운동이 전통적인 사회운동과 아주 다른 특징을 띠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지도부를 대변인으로 바꾸고, 곧이어 청원을 반체제 선언문으로 바꾸고, 나중에는 단체를 만민회의로 바꾸었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적 폭발 국면에 이르면서 마침내 모든 것이 사라졌다. 대변인도 단체도 만민회의도 선언문도 없어서, 대체 사회운동의 대표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다수의 사람이 이를 전혀 약점으로 여기지 않고 강점으로 여긴다. 이제 그 누구도 자신들을 위해서 협상에 나서서 배신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운동의 이름으로 말하려는 모든 정치적 시도, 특정 정치 혹은 사회 단체가 진두지휘하려는 모든 징후는 광범위한 비난에 직면하여 즉각 침묵한다. 이제 아무도 감히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한다. 대신 동네마다 주민회의, 가족 단위로 작성된 구호 벽보, 다양한 대의를 내세운 작은 조직, 신선한 시각과 주제로 공적 논쟁에 뛰어들어든 새로운 인물, 전통적인 정치인 대신 전국민적으로 지명도가 높아진 자치단체장, 영원히 묵살되어 온 주거지 분리, 선주민, 일상의 폭력 같은 주제들이 의제를 점령한다. 정말로 다른 칠레다.

칠레의 정치 제도는 이 도전에 대응하기에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듯하다. 정치권의 대응 역시 마트료시카를 방불케 해서, 도전에 응답할 때마다 궁지에

4) 칠레는 2003년부터 전국 단위 학력고사로 대학생을 선발해 왔는데, 이 일률적인 선발 방식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여주).

빠진다. 이제 수많은 국내외 단체에 의해 입증되었듯이, 경찰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정부는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결단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고, 난폭함에 무용함을 더한 억압적 상황 전개에 편승했다. 그리하여 공공질서 회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폭력과 파괴만 야기했다. 정치권은 개헌 합의는 제 때 이끌어냈지만, 그 뒤로는 실수를 연발했다. 야권은 8개 파당으로 분열되어 제한된 TV 유세 시간을 자기들끼리 다투어야 하고, 이에 따라 개헌 관련 메시지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상호 비방, 혼란스러운 메시지, 과도한 신뢰 등은 어마어마한 자살골로 귀결될 수 있다. 우파 역시 발이 꼬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개헌을 지지하던 일부 우파 세력조차 이제는 퇴각하여 참호를 구축한 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캠페인을 조장하고 있다. 여권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신헌법 제정에 찬성하였다. 이들은 지금까지 가장 흥미로운 대응을 한 집단일 것이다. 변화를 원하는 사회에 부응하여, 정치 지도자들이 꿈수 부리지 말고 이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칠레에서든 세계에서든, 사회적 전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적 동원, 민주적 승리, 공익을 위한 정치적 응답(사회의 요구와 늘 제약이 있는 국가적 해결 역량을 중재하는 정치적 응답) 도출 역량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칠레에서는 중재 회로가 박살이 나서, 중재에 나서면 더 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든 권위와 실용주의가 탈법적인 억압이나 기만과 혼동되고 있다. 모든 대화는 포기고, 모든 헌신은 배신이고, 모든 합의는 패배다.

결국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정치적·사회적 층위에서 지도층의 전면적인 교체, 진정한 사회적 협약이 반영된 신헌법의 틀에 입각한 제도적 쇄신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 행보에는 필연적으로 기존 정치권이 개입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전면적인 붕괴를 통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시스템 붕괴가 발생하면, 우리는 일찍이 그 길을 걸어

간 모든 프로세스가 겪은 민주주의의 축소, 권위주의적 모험, 심각한 반(反)개혁적 위험 등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국면의 커다란 딜레마는 평판과 지지도가 낮은 이 약화된 정치권이 어떻게 이 이행을 견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취약하다 해도 정치권은 국민에게 권한을 받아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제도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행은 정치권에게 어려운 과업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과업 수행에 실패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그 대가는 오늘과 내일의 칠레 국민이 고스란히 치를 것이다. 한 마디로 실패할 권리가 없다. 칠레 정치의 도전 과제는 너무나 크다. 그래서 다음 네 가지 과제처럼 근본적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a) 출발점이 될 합의, 즉 근본적인 사회개혁 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개혁 과정이 불신과 (다른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들까지 해결하라는) 압력에 휘둘릴 것이다. 적어도 복지, 보건, 경찰 개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경찰 개혁에는 경찰에 권한을 부여하는 검찰 정의에 관한 협약도 포함되어야 한다).

복지 개혁은 벌써 논의 중이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할 진전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보건 분야에서는 현재의 이중적 시스템, 즉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시스템을 극복할 보편적 의료보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경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폭발 국면에서의 유감스러운 폭력 행사와 적나라하게 드러난 비효율성으로 인해, 심도 깊은 경찰 개혁,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진정한 문민통제 확립에 나설 수밖에 없다. 세수 증대와 누진세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재정 협약은 칠레에 필요한 사회적 협약의 또 다른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 부가가치세 방식뿐만 아니라 직접세를 통해 불평등 감소에 기여할 조세 체계를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야권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 명확하고 중지를 모은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 야권의 제안이 있어야 현재 분산되어 있는 아주 다양한 시민 계층을 한데 모을 수 있고, 정부와의 논의를 위한 공통의 노선을 창출할 수 있다. 필요성 때문이든 신념 때문이든 간에, 이런 유형의 개혁 추진에 우파가 지금처럼 개방적인 적이 없었다. 열린 공간을 허비할 수 없고, 그 공간을 이용하려면 여태껏 결여되어 있던 조율과 실용주의가 요구된다. 아직 시간은 있다. 2020년이 개헌 과정이 성공적으로 시작될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협약 역시 도출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b) 향후의 일에 정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전술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의 정치로는 곤란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전통적인 스타일의 정치는 이미 오래전에 불신의 늪에 빠졌고, 지명도가 높아진 새로운 인물들의 여러 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현재의 칠레 위기는 헌법에 관한 많은 논란, 또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치와 관련된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위기를 정치적 행동을 위한 혁신적 실험실로 탈바꿈시키는 일이다. 아마 그것이 가장 중요한 도전일 것이다. 적어도 일부 새신책은 사회를 체계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사이클에 진입시킬 것이다. 그러나 시민에게 아부하고 입맛에 맞는 해답만 제공하는 방식은 안 된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고, 결정의 공동 책임자가 되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은 '시민 참여'라는 통상적인 담론과는 아주 다르다. 우리가 오늘날 칠레와 다른 많은 나라에서 목도하고 있는 정치 위기가 정치와

사회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은 신기루이다. 사실 사회 자체의 내부 갈등들이 표출된 것이고, 정치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공감하고,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단견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더 듣고, 다른 방식으로 숙고하고, 긴장 요소들을 진지하게 드러내고, 갈등 당사자들이 누군지 밝혀내고, 가능한 결정의 한계와 대가와 결과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사회이다. 그 운동장에서 땀 용의가 있는 정치라면 자신의 언어와 실천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각각의 결정이 초래할 딜레마들을 투명하게 사회에 통용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지,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들의 덕목만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일은 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역할을 복원시켜야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서사시는 무엇보다도 의견 대립 역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신념이다. 민주주의는 차이를 존중하는 서사시, 자기 견해도 의심하고 스스로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서사시에 의거하고 있다. 정치의 도덕화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신뢰의 위기에 설교 페스티벌로 응답하면, 그 위기는 심화될 뿐이다. 지금까지 칠레 정치가 수행한 자신과 시민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오늘날의 세계에 필요한 것은 행진하는 시민들처럼 행동하는 당국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당국자로 여기고 제반 결정에 같이 책임을 지는 시민들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정치는 활력 있고, 성숙하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발현시킬 제도와 실천에 이르는 길을 닦는 정치이다. 신헌법이 그런 기조의 제도를 확고하게 도출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제도를 방해하지 않고, 거기에 이르기 위한 실험과 실수를 용납하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진전일 것이다.

c) 칠레 위기의 가장 뚜렷한 결과 중 하나는 폭력이 정치의 핵심 주제로 재등장한 일이다. 제반 사회적 갈등 속에서 폭력의 역할을 두고 그 합법성과 비합법성,

기원과 상이한 표현들, 예방책과 퇴치법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논쟁이 계속되면서 경계가 대단히 모호해졌다. 모든 여론 조사는 다수가 폭력적 방식의 저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건만, 집요하게 되풀이 되는 사건들은 그런 동원 방식을 확고하게 배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시위에 가담한 광범위한 영역의 사람들과 이를 지지한 더 광범위한 영역의 사람들은 폭력적 행동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한, 한편으로는 폭력과 거리를 두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찬양하는 담론들도 배격하지 않았다.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던 논지는 폭력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폭력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더 심층적인 개혁을 위한 공간도 열리지 않았으리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지였다.

폭력 논쟁은 여러 가지 차원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폭력에 대해 아무도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다. 칠레 사회는 질서와 제도를 준수하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대단히 폭력적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시위의 폭력성의 상당 부분이 경찰의 난폭함과 무능에 따른 것이기에, 경찰 문제가 해결되는 날에는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들 생각한다. 또한 폭력은 정치 시스템의 난맥상, 이를 초래한 제도적 매듭을 너무 오래 못 풀고 있는 점 등에 따른 좌절의 소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일부 시위의 공격성과 파괴 분위기는 많은 칠레인에게 엄청난 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도시 변두리, 마약상이 장악한 동네, 국가의 우선순위에서 먼 동네에 사는 많은 다른 칠레인에게는 일상의 빵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주제는 칠레 사회가 향후 몇 달 내에 다루어야 할 급박한 논쟁거리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독재의 트라우마와 인권 유린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칠레 같은 나라가 민주주의가 인권 존중과 보호에는 무능하다는 의구심, 인권 침해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

별하는 데는 무능하다는 의구심에 빠지게 하는 일이다. 국가가 공공질서 보장에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용인할 수 없다. 칠레가 필요로 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민주적 논쟁보다 폭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더욱 용인할 수 없다. 오늘날 이 모든 사안이 의구심을 사고 있다. 만일 그 경계가 흐려진다면, 칠레 민주주의는 영구적 손상을 입어 신헌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폭력을 멈추게 하는 과제도 많은 차원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우리의 논쟁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몰아가는 유일한 방법, 인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 공공질서를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신뢰 구축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은 없다.

d) 마지막으로, 칠레가 착수한 개헌 과정을 구실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환영(幻影)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미 여러 인사가 개헌을 자신의 전략으로 삼을 작정을 했다. 개헌 과정을 기회로 보는 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칠레의 역대 헌법 중에서 민주적·참여적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헌법이 다 승자의 의지와 패자의 배제에 따른 산물이었다. 모든 헌법이 실질적으로 소수의 사회그룹에 불과한 백인 남성들끼리 만들었다. 칠레의 그 어떤 세대도 오늘날처럼 그런 역사를 바꿀 가능성, 칠레 사회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남녀 동수로 구성된 대표자와 선주민 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민주적으로 헌법을 작성할 가능성을 가진 적이 없었다. 이런 엄청난 역사적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데 희망과 통합의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신뢰를 구축하고, 그런 의지를 한데 모아야 할 정치권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대체로 사소한 논쟁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개헌 과정이 끝나고 나면, 작금의 지명도 높은 사람 중 많은 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많은 정치 지도자가 물갈이될 것이고,

이들 간의 많은 다름이 시간의 미로에서 망각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미래로 가는 길을 여는 데 전념한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세계의 잔해를 끼리끼리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만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우석균 옮김